

COMMENT

2019 지방9급 행정학은 대체로 평이하게 출제되었습니다. 정형화된 기출문제의 비중이 높지는 않았지만 전반적으로 난이도가 그리 높지 않고 동형문풀 모의고사(ALL PASS 시리즈)와 비슷한 유형의 지문들이 많아 행정학의 기본적인 내용을 숙지하고 있었던 수험생이라면 95점 이상 충분히 고득점이 가능한 출제였다고 봅니다. 다만, 문7의 통합재정에 관한 문제, 문10의 문재인 정부 조직개편에 관한 문제, 문19의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문제, 문20의 국가채무에 관한 문제 정도가 비교적 난이도가 있는 문제들이었는데 이들 문제들에 의하여 고득점여부가 결정되리라고 봅니다. 문20을 제외하고는 모두 수업 때 강조했던 문제들이어서 선행행정학으로 공부한 수험생들이라면 큰 어려움 없이 고득점에 성공했으리라 기대해 봅니다. 그러나 아무리 문제가 쉬워도 실전에서 실수 없이 고득점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므로 이번 지방9급 행정학은 85점 이상이면 상위 20%에 해당하는 성적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예측해봅니다. 수험생 여러분, 그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 부디 좋은 결과로 금년도 9급 공무원 수험시전을 마무리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 김중규 -

01 행정이 추구하는 가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②»

- ① 합리성은 어떤 행위가 궁극적인 목표달성을 위한 최적의 수단이 되느냐를 가리키는 개념이다.
- ② 효과성은 투입 대비 산출의 비율을, 능률성은 목표의 달성도를 나타내는 개념이다.
- ③ 행정의 민주성은 대외적으로 국민 의사의 존중·수렴과 대내적으로 행정조직의 민주적 운영이라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 ④ 수평적 형평성이란 동등한 것을 동등하게 취급하는 것, 수직적 형평성이란 동등하지 않은 것을 서로 다르게 취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 행정이념의 종류와 변천

이념	개념	행정이론
합법성	법률적합성	관료제이론
능률성	산출/투입	행정관리설
민주성	국민을 위한 행정	통치기능설
합리성	목표에 대한 수단의 적합성	행태론
효과성	목표달성도	발전행정론
형평성	소외계층 위주의 행정	신행정론
생산성	능률성 + 효과성	신공공관리론
신뢰성	정부에 대한 국민의 믿음	뉴거버넌스

본질적 가치 - 형평, 공익, 정의, 자유, 복지, 평등

참고 2019 9급 선행행정학개론 p.77

02 대표관료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②»

- ① 소극적 대표가 적극적 대표를 촉진한다는 가정 하에 제도를 운영해 왔다.
- ② 업관주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등장하였으며 역차별의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
- ③ 소극적 대표성은 전체 사회의 인구 구성적 특성과 가치를 반영하는 관료제의 인적 구성을 강조한다.
- ④ 우리나라는 균형인사제도를 통해 장애인·지방인재·저소득층 등에 대한 공직진출 지원을 하고 있다.

해설

대표관료제는 공직 구성을 출신집단 비율별로 할당임용하는 제도로 실적에만 의존하는 실적주의의 폐단을 극복하기 위한 제도이다. 다만 동일한 능력자를 할당에 의하여 역차별한다는 논란이 있다.

참고

2019 9급 선행정학개론 p.459

03 조직의 의사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 ① 전통적 델파이 기법은 전문가들의 다양성을 고려해 의견일치를 유도하지 않는다.
- ② 현실의 세계에서는 완벽한 합리성이 아닌 제한된 합리성의 상황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 ③ 브레인스토밍 과정에서는 타인의 아이디어를 비판하거나 평가하지 말아야 한다.
- ④ 고도로 집권화된 구조나 기능을 중심으로 편제된 조직의 의사결정은 최고관리자 개인이 주도하는 경우가 많다.

해설

전통적 델파이가 아니라 정책델파이의 특성이다. 전통적 델파이는 동질적인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견일치를 유도하려는 예측기법이지만 정책델파이는 다양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을 참여시켜 그들 간 의견차이를 확인하는 예측기법이므로 근접된 의견이나 합의의 유도를 추구하지 않는다.

전통적 델파이와 정책델파이의 비교

구분	전통적 델파이	정책델파이
적용	일반문제에 대한 예측	정책문제에 대한 예측
응답자	동일영역의 일반전문가	이해관계자 등 식견 있는 다양한 창도자
익명성	철저한 격리성과 익명성	선택적 익명성 보장(사후상호교차토론)
통계처리	의견의 대푯값·평균치(중위값) 중시	의견차이나 갈등을 부각시키는 양극화(이원화)된 통계처리
합의	합의(근접된 의견) 도출	구조화된 갈등(극단적이거나 대립된 견해의 존중·유도)
토론	없음	컴퓨터를 통한 회의 및 대면토론

참고

2019 9급 선행정학개론 p.229

04 정책 환경의 불확실성을 극복하는 대처방안 중 소극적인 방법에 해당하는 것은?

« ④

- ① 상황에 대한 정보의 획득
- ② 정책실험의 수행
- ③ 협상이나 타협
- ④ 지연이나 회피

해설

①②③은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방법에 해당하고 ④의 지연이나 회피는 소극적 방법에 해당한다.

☞ 불확실성에의 대처방안

적극적 대처방안	소극적 대처방안
① 불확실성을 유발하는 환경(상황)의 통제 ② 모형이나 이론의 개발·적용 ③ 정보의 충분한 획득 ④ 정책실험, 브레인스토밍, 정책델파이기법 등	① 보수적 결정 ② 가외성 설치 ③ 민감도분석 ④ 상황의존도 분석 ⑤ 약조건 가중분석 ⑥ 분기점 분석 ⑦ 복수의 대안 제시

참고

2019 9급 선행정학개론 p.232

05 광역행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③

- ① 기존의 행정구역을 초월해 더 넓은 지역을 대상으로 행정을 수행한다.
- ② 행정권과 주민의 생활권을 일치시켜 효율성을 촉진시킬 수 있다.
- ③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기 어렵다.
- ④ 지방자치단체 간에 균질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로 작용해 왔다.

해설

광역행정은 기존의 자치구역보다 더 넓은 구역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이므로 규모의 경제에 의한 비용절감효과가 있다.

☞ 광역행정의 필요성과 한계

필요성	① 규모의 경제에 의한 경비절약 ② 교통통신의 발달에 따른 생활권과 행정권의 불일치 ③ 외부효과에의 대처 - 비용부담지역과 수혜지역 일치 ④ 도시화·산업화의 급속한 촉진 ⑤ 복지국가의 요청에 따른 행정서비스의 균질화·평준화 - 지역 간 재정력 격차 해소와 National Minimum과 Civil Minimum의 조화 ⑥ 지방분권(민주성)과 중앙집권(능률성)의 조화
한계	① 지방자치(풀뿌리 민주주의)의 위협 ② 일상적인 기초단체 행정수요 경시

참고

2019 9급 선행정학개론 p.759

06 옴부즈만(Ombudsman)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④

- ① 행정에 대한 통제 기능을 수행한다.
- ② 스웨덴에서는 19세기에 채택되었다.
- ③ 옴부즈만을 임명하는 주체는 입법기관, 행정수반 등 국가별로 상이하다.
- ④ 우리나라의 국민권익위원회는 헌법상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되었다.

해설

우리나라 옴부즈만에 해당하는 국민권익위원회는 헌법상 기구가 아닌 법률상 기구(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로써 대통령 소속이 아닌 국무총리 소속 기관이다.

☞ 우리나라 옴부즈만제도의 특징

- ① 헌법상 기관이 아닌 법률상 기관 - 조직상 안정성 부족
- ② 정부 내(총리 소속 국민권익위원회)에 설치 - 내부통제
- ③ 신청에 의한 조사만 가능하며 직권조사권이 없다.
- ④ 입법·사법부 통제 불가

참고

2019 9급 선행정학개론 p.686

07 통합재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 ①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포함한다.
- ② 통합재정의 기관 범위에 공공기관은 포함되지만, 지방자치단체는 포함되지 않는다.
- ③ 국민의 입장에서 느끼는 정부의 지출 규모이며 내부거래를 포함한다.
- ④ 2005년부터 정부의 재정규모 통계를 사용하고 있으며 세입과 세출을 총계 개념으로 파악한다.

해설

통합재정이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및 지방재정까지 총망라하여 국가 전체 재정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재정 지표로서 회계간의 중복분인 내부거래를 공제한 예산순계 개념으로 작성된다.

- ☑ ② [×] 통합재정의 기관범위에 지방자치단체는 포함되지만 독립된 법인인 공공기관은 포함되지 않는다.
- ③ [×] 통합재정은 회계간 중복분인 내부거래를 차감하고 순수한 재정규모를 파악한다.
- ④ [×] 2005년부터 정부의 재정규모 통계를 사용하고 있으나 세입과 세출을 순계 개념으로 작성한다.

참고

2019 9급 선행정학개론 p.597

08 로위(Lowi)가 제시한 구성정책의 사례로 옳지 않은 것은?

« ④

- ① 공직자 보수에 관한 정책
- ② 선거구 조정 정책
- ③ 정부기관이나 기구 신설에 관한 정책
- ④ 국유지 불하 정책

해설

국유지의 불하 등은 구성정책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서비스나 기회, 이득을 나눠주는 배분정책에 해당한다. 구성 정책이란 정부조직의 신설이나 선거구역의 획정 등 행정체제의 유지를 위한 정책을 의미한다.

Lowi의 정책유형

구분	개념	예	특징	주도
구성정책	행정체제 정비	정부기관 신설, 선거구역 획정, 공무원의 보수·연금 등	게임의 법칙	정당
배분정책	서비스 배분 (개별화 정책)	SOC, 보조금 등	포크배럴, 로그롤링	의회
규제정책	제약과 통제	진입규제, 독과점규제	다원주의(포획, 지대추구)	이익집단
재분배정책	부의 이전	사회보장정책	엘리트이론	엘리트

참고

2019 9급 선행정학개론 p.187

09 예산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

- ① 예산과정은 예산편성-예산집행-예산심의-예산결산의 순으로 이루어진다.
- ②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확보하기 위해 예비비, 총액계상 제도 등을 활용하고 있다.
- ③ 예산제도 개선 등으로 절약된 예산 일부를 예산성과금으로 지급할 수 있지만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는 없다.
- ④ 각 중앙부처가 총액 한도를 지정한 후에 사업별 예산을 편성하고 있어 기획재정부의 사업별 예산통제 기능은 미약하다.

해설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확보하기 위해 예비비(예측하지 못한 지출이나 예산부족 시에 대비한 경비), 총액계상 제도(예산을 세부사업이 아닌 총액으로 편성·심의하는 예산) 등을 활용하고 있다.

- ☑ ① [×] 예산과정은 예산편성-예산심의-예산집행-예산결산의 순으로 이루어진다.
- ③ [×] 예산제도 개선 등으로 절약된 예산 일부를 예산성과금으로 지급할 수도 있지만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도 있다.
- ④ [×] 우리나라는 현재 자율편성제도를 도입하고 있지만 기획재정부가 총액 한도를 지정한 후에 각 중앙부처가 사업별 예산을 편성하고 있어 기획재정부의 사업별 예산통제 기능은 유지되고 있다.

예산집행의 통제와 신축성 유지방안

학설	특징
재정통제	예산의 배정
	배정
	재배정
	지출원인행위에 대한 통제
	정원·보수에 대한 통제
	예산안편성지침
신축성 유지	통합예산
	총사업비제도
	이용
	전용
	이체
	이월
	계속비
	예비비
	긴급배정
	추가경정예산
	준예산
	대통령의 재정에 관한 긴급명령권
	총괄배정예산(지출대예산)
	다년도예산
	국고채무부담행위
	지출통제예산(총액계상예산제도)
	장기계속계약제도

참고

2019 9급 선행정학개론 p.642

10 2016년 이후 정부조직의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④

- ①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였다.
- ② 행정안전부의 외청으로 소방청을 신설하였다.
- ③ 국가보훈처가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격상되었다.
- ④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관할권을 환경부에서 국토교통부로 이관하였다.

해설

①②③은 문재인 정부 들어 이루어진 정부조직 개편내용으로 모두 옳은 지문이지만 ④는 틀리다. 2018.6 물관리 기능이 환경부로 일원화되면서 종래 국토교통부가 담당하던 수량관리기능도 환경부로 일원화되었다. 따라서 홍수통제·조절기능 등을 담당하는 한국수자원공사는 소속이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되었다.

☞ 문재인 정부 정부조직 개편내용(2018)

- ①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 ② 국민안전처 폐지
- ③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개편
- ④ 해양경찰청과 소방청 분리·독립
- ⑤ 국가보훈처장 장관급으로 격상
- ⑥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개편
- ⑦ 물관리기능 환경부로 일원화

참고

2019 9급 선행정학개론 p.395

11 직업공무원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②

- ① 젊고 우수한 인재가 공직을 직업으로 선택해 일생을 바쳐 성실히 근무하도록 운영하는 인사제도이다.
- ② 폐쇄적 임용을 통해 공무원집단의 보수화를 예방하고 전문행정이 양성을 촉진한다.
- ③ 행정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고, 높은 수준의 행동규범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 ④ 조직 내에 승진적체가 심화되면서 직원들의 불만이 증가할 수 있다.

해설

직업공무원제도는 젊고 유능한 인재를 공직에 영입시켜 생애동안 공직에 근무하도록 신분을 보장하여 주는 인사제도로 지나친 신분보장이 공무원집단의 보수화(특권집단화)를 초래하고 폐쇄형 인사로 인한 행정의 전문성을 저해한다는 단점이 있다.

- ☑ ① [○] 직업공무원제의 개념으로 옳은 지문
- ③ [○] 직업공무원제도는 폐쇄형에 입각하여 신분이 보장되므로 행정의 안정성·계속성을 확보하고 높은 수준의 행동규범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 ④ [○] 직업공무원제도는 인재의 외부진출이 이루어지지 않고 승진지망의 과열현상이 빚어지며 승진적체라는 어려운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

☞ 직업공무원제의 장단점

장점	단점
① 사기제고	① 민주통제의 곤란
② 인재 발굴	- 지나친 신분보장
③ 연대감 향상	② 환경변동에의 부적응
④ 행정의 안정성	- 무사안일
⑤ 고위 공직자의 양성	③ 임용의 기회균등 저해
	④ 참여적 관료제 저해
	⑤ 자격제한
	- 비민주성
	⑥ 공직사회 전반적인 질 저하
	⑦ 행정의 전문성 저해
	⑧ 승진적체 초래

참고

2019 9급 선행정학개론 p.456

12

미국에서 등장한 행정이론인 신행정학(New Public Administration)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②»

- ① 신행정학은 미국의 사회문제 해결을 촉구한 반면 발전행정은 제3세계의 근대화 지원에 주력하였다.
- ② 신행정학은 정치행정이론론에 입각하여 독자적인 행정이론의 발전을 이루고자 하였다.
- ③ 신행정학은 가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기초로 규범적이며 처방적인 연구를 강조하였다.
- ④ 신행정학은 월도(Waldo)가 주도한 1968년 미노브룩(Minnowbrook)회의를 계기로 태동하였다.

해설

신행정론은 1960년대 말 미국사회의 격동기시기에 빈곤, 차별, 소외, 폭동 등의 국내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행정의 적실성과 실천성을 강조하며 등장한 정책과 가치 중심의 정치행정이론론에 입각하여 독자적인 행정이론의 발전을 이루고자 하였다.

신행정론의 주요 특징

- ① 사회적 형평 등 행정의 새로운 가치 중시 – 가치주의, 인본주의 행정학
- ② 격동에의 대응과 행정의 독립변수적 역할 및 적극적 가치관 중시
 - ‘관조’가 아니라 사회문제 해결자로서의 ‘실천’하는 적극적 행정인 중시, 적실(relevance)과 실천(action) 강조
 - 정책 및 문제지향성 – 정치행정신이론론
 - 행태론의 지양과 현상학적 접근법 추구
 - 간주관성 및 능동적, 사회적 자아 중시
 - 과학적 방법을 포기(배격)한 것은 아님
 - 과학적 지식을 문제해결에 활용할 것을 주장
 - 사회적 적실성 · 기술성(처방성) · 대응성 강조
 - 후기관료제모형
 - 계층제의 타파로 민주적 · 동태적 · 도덕적 · 분권적 · 다원적 조직 주장
 - 고객지향적 행정과 민주적 행정 모형 강조
 - 수익자의 참여와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

참고

2019 9급 선행정학개론 p.138

13

‘변혁적 리더십(transformational leadership)’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 ① 조직참여의 기대가 적은 경우에 적합하며 예외관리에 초점을 둔다.
- ② 리더가 부하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거나 자긍심과 신념을 심어준다.
- ③ 리더가 부하들의 창의성을 계발하는 지적 자극(intellectual stimulation)을 중시한다.
- ④ 리더가 인본주의, 평화 등 도덕적 가치와 이상을 호소하는 방식으로 부하들의 의식수준을 높인다.

해설

- ① 변혁적 리더십은 변화를 중시하는 유기적 구조에 적합한 리더십으로 부하들의 노력과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중시하는 전통적인 거래적 리더십과는 대조를 이룬다. 종래의 거래적 리더십은 안정을 중시하는 기계적 구조에 적합한 리더십이다. 따라서 변혁적 리더십은 구성원들이 변화와 참여에 대한 의지나 기대가 큰 경우에 적합하며 예외에 의한 관리보다는 변혁적 관리에 초점을 둔다. 예외에 의한 관리란 합의된 성과수준에 도달하지 못할 때에만 리더가 개입을 하는 고전적인 행정관리원칙으로 거래적 리더십의 주요 특징에 해당한다. 거래적 리더십은 조건적 보상과 예외에 의한 관리를 중시한다.
- ☑ ② [○] 개별적 배려 및 카리스마적 리더십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지문
- ③ [○] 과거의 관행을 타파하고 새로운 관념의 촉발을 중시하는 지적 자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지문
- ④ [○] 변혁적 리더십은 물질적인 보상보다는 도덕적 가치와 이상에 의한 영향화를 중시한다.

변혁적 리더십

- ① 카리스마적(위광적) 리더십 - 도덕적 수범, 신뢰, 존경, 리더와의 헌신과 일체감
- ② 영감적 리더십 - 도전적 목표와 임무, 미래에 대한 비전 제시 · 공유
- ③ 지적 자극 - 관행타파 및 새로운 관념 촉발
- ④ 개별적 배려 - 개개인의 특성 고려

거래적 리더십과 변혁적 리더십의 비교

	거래적 리더십	변혁적 리더십
변화관	안정 지향, 폐쇄적	변화 지향, 개방체제적
초점	하급관리자	최고관리층
관리전략	리더와 부하간의 교환관계나 통제, 예외에 의한 관리, 조건적 보상	영감과 비전제시 · 공유, 도덕적 가치와 이상에 의한 동기유발
이념	능률지향	적응지향
조직구조	기술구조(기술위주)	경계직용적 구조(환경과 연계작용)
관련 조직	기계적 관료제, 합리적 구조에 적합	단순구조나 임시조직 등 탈관료적 · 유기적 구조에 적합

참고

2019 9급 선행정학개론 p.349

14 정책결정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③

- ① 린드블롬(Lindblom)같은 점증주의자들은 합리모형이 불가능한 일을 정책결정자에게 강요함으로써 바람직한 정책결정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 ② 사이먼(Simon)의 만족모형은 합리모형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인간의 인지능력이라는 기본적인 요소에서 출발했기에 이론적 영향이 컸다.
- ③ 에치오니(Etzioni)는 합리모형과 점증모형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최적모형을 주장하였다.
- ④ 스타인부르너(Steinbruner)는 시스템 공학의 사이버네틱스 개념을 응용하여 관료제에서 이루어지는 정책결정을 단순하게 묘사하고자 노력하였다.

해설

에치오니(Etzioni)는 합리모형과 점증모형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혼합주사모형을 주장하였다. 혼합주사모형은 근본적 결정에 대해서는 합리모형을, 세부적 결정에 대해서는 점증모형을 혼합적으로 적용시킨 제3의 모형이다. 최적모형은 드로(Y.Dror)가 초합리성을 강조하며 주장한 모형이다.

- ☑ ① [○] 합리모형의 비현실성을 지적한 설명으로 옳은 지문
- ② [○] 사이먼(Simon)은 합리모형이 강조한 경제인을 부정하며 의사결정자의 인지능력상 한계를 강조하였다.
- ④ [○] 사이버네틱스 모형은 와이너(Wiener)에 의하여 창시되고 애쉬비(Ashby)에 의하여 계승되었으며 스타인부르너(Steinbruner)에 의하여 응용되어 정부관료제에서 이루어지는 정책결정과정을 단순하게 묘사하려고 하였다.

참고

2019 9급 선행정학개론 p.240

15 주민참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④

- ① 주민참여제도에는 주민투표, 주민소환, 주민소송 등이 있다.
- ② 「지방자치법」에서는 주민소송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 ③ 지역구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는 당해 지방의회의원의 지역선거구를 대상으로 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18세 이상의 외국인에게도 주민투표권이 부여된다.

해설

외국인의 경우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체류자격변경허가 또는 체류기간연장허가)을 통하여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람은 주민투표권을 가지지만 그 경우에도 19세 이상이어야 한다.

- ☑ ① [○] 주민참여제도에는 주민투표(2004), 주민소환(2007), 주민소송(2006) 등이 있다.
- ② [○] 지방자치법 제17조에 주민소송에 관한 법적근거가 명시되어 있다.
- ③ [○] 지역구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는 당해 지방의회의원의 지역선거구를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다른 지역구의원이나 비례대표의원은 제외된다.

주민투표법 제5조

제5조(주민투표권) ① 19세 이상의 주민 중 제6조제1항에 따른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주민투표권이 있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에게는 주민투표권이 없다. <개정 2009. 2. 12., 2016. 5. 29.>

1.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체류자격변경허가 또는 체류기간연장허가)을 통하여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람

참고

2019 9급 선행정학개론 p.804

16 다음 특징을 가진 정책변동 모형은?

« ③

- 분석단위로서 정책하위체제(policy sub-system)에 초점을 두고 정책변화를 이해한다.
- 신념체계, 정책학습 등의 요인은 정책변동에 영향을 준다.
- 정책변동 과정에서 정책중재자(policy mediator)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 ① 정책흐름(Policy Stream) 모형
- ② 단절적 균형(Punctuated Equilibrium) 모형
- ③ 정책지지연합(advocacy Coalition Framework) 모형
- ④ 정책패러다임 변동(Paradigm Shift) 모형

해설

제시된 특징들은 모두 사바티어와 마즈매니언(Sabatier & Mazmanian)의 정책지지연합모형의 특징에 해당한다. 정책지지연합모형은 정책집행과정을 정책하위시스템 내에서 신념을 공유하는 여러 정책지지연합들 간 경쟁의 산물로 묘사한다.

☞ 정책집행과 정책변동

- (1) 점증모형 : 정책은 쉽게 변동되지 않음
- (2) 정책변동모형(단절적 균형모형) : 정책이 어떤 계기로 변동되는 이유를 설명(단절 이후 균형 유지)
 - ① 정책지지연합모형(Sabatier 등) : 정책은 장기간(10년 이상)에 걸쳐 점진적으로 변동되는 학습과정임
 - ② 정책패러다임변동모형(P.Hall) : 정책은 급격한 변동이 쉽지 않다는 Sabatier의 주장과 달리 정책의 근본적인 패러다임이 급격히 변동될 수도 있다는 모형(자유방임주의 ⇒ 케인즈주의 ⇒ 통화주의 등)

점증모형 (비단절모형)	정책변동모형(단절적 균형모형) - 정책변동 인정	
정책변동이 쉽지 않음	정책지지연합모형(Sabatier)	점진적 변동(정책학습)
	정책패러다임변동모형(P.Hall)	급격한 변동

참고

2019 9급 선행정학개론 p.266

17 정책평가에서 내적 타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 ① 준실험설계보다 진실실험설계를 사용할 때 내적 타당성의 저해요인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 ② 정책의 집행과 효과 사이에 존재하는 인과관계의 추론이 가능한 평가가 내적 타당성이 있는 평가이다.
- ③ 허위변수나 혼란변수를 배제할 수 있다면 내적 타당성을 높일 수 있다.
- ④ 선발요인이나 상실요인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무작위배정이나 사전측정이 필요하다.

해설

준실험설계보다 진실실험설계를 사용할 때 내적 타당성의 저해요인이 감소되어 내적 타당도가 높아질 수 있다.

☞ 정책실험의 종류별 장단점

구분	동질성	내적타당도	외적타당도	실행가능성
비실험	통제집단 없음	X	O	O
준실험	없음	△	△	△
진실험	있음	O	X	X

참고

2019 9급 선행정학개론 p.294

18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③

- ① 평정대상자의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하지만 적성, 근무태도 등은 평가하지 않는다.
- ② 중요사건기록법은 평정대상자로 하여금 자신의 근무실적을 스스로 보고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 ③ 평정자가 평정대상자를 다른 평정대상자와 비교함으로써 발생하는 오류는 대비오차이다.
- ④ 우리나라의 6급 이하 공무원에게는 직무성과계약제가 적용되고 있다.

해설

평정자가 평정대상자를 다른 평정대상자와 비교함으로써 발생하는 오류는 대비오차이다.

- ☑ ① [×] 평정대상자의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을 주로 평가하며 적성, 근무태도 등도 일반적으로 평가대상에 포함된다. 우리의 경우 실적과 능력은 필수항목이며 태도는 임의항목이다.
- ② [×] 중요사건기록법이 아니라 자기평정법에 대한 설명이다.
- ④ [×] 우리나라의 경우 4급 이상 공무원에게는 직무성과계약제가 적용되고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근무성적평가가 시행되고 있다.

☞ 근무성적평정상 착오

오류	개념	방지방안
연쇄효과	특정 평정요소의 평정결과나 전반적인(막연한) 인상이 평정에 영향을 주는 착오	강제선택법
시간적 오차	최근의 실적·사건이 평정에 영향을 주는 근접 오류	목표관리법 중요사건기록법
집중화의 오차	중간에 절대다수가 집중되는 경향	강제배분법
관대화의 오차	실제보다 너그럽게 후한 평정을 하는 것	강제배분법
규칙적 오차	지속적으로 과대 or 과소평정 ↔ 총계적 오차 (불규칙)	
논리적 오차	평정요소 간에 존재하는 논리적 상관관계에 의한 오류	
상동적 오차 (stereotyping)	유형화(정형화·집단화)의 착오로 선입견·고정 관념에 의한 오차	
피그말리온효과	자기충족적 예언효과	
유사오차	자신과 코드나 신념이 비슷한 대상자에게 후한 점수를 주는 오류	
대비오차	평정자가 평정대상자를 다른 평정대상자와 비교함으로써 발생하는 오류	

참고

2019 9급 선행정학개론 p.506

19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④

- ① 기존에 유지된 타당성조사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2013년부터 도입하였다.
- ② 신규 사업 중 총사업비가 300억 원 이상인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에 포함된다.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기획재정부장관과 그 결과를 협의해야 한다.
- ④ 조사대상 사업의 경제성, 정책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판단한다.

해설

예비타당성조사란 총사업비 500억(국고지원 300억) 이상의 신규사업에 대하여 주무부처가 기술적 관점에서 타당성조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기획재정부가 경제적·정책적 차원에서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판단하는 재정 통제제도이다. 대형신규사업의 신중한 착수를 위하여 1999년 정부가 도입하였다.

- ☑ ① [×] 기존에 유지된 타당성조사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1999년부터 도입하였다.
- ② [×] 신규 사업 중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국고지원 300억 원 이상)인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에 포함된다.
- ③ [×] 예비타당성조사는 중앙행정기관장이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실시한다.

☞ 타당성조사와 예비타당성조사의 비교

	타당성조사	예비타당성조사
주체	주무사업부	중앙예산기관
조사의 초점	기술적 측면	경제적·정책적 측면
중점	사업착수조사	투자우선순위 결정
조사의 범위	당해사업	국가재정 전반적 관점
특징	사후적·세부적	사전적·계략적
조사기간	장기	단기

☞ 우리나라 성과중심의 재정제도 도입

1994	총사업비
1999	예비타당성조사
2003	재정사업 목표관리
2005	자율편성제도, 재정사업자율평가
2006	재정사업심층평가
2007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D-BRAIN, 프로그램예산
2008	발생주의 및 복식부기
2010	조세지출예산, 성인지예결산

참고

2019 9급 선행정학개론 p.654

20 국가채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③

- ① 기획재정부장은 국가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국채를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③ 우리나라가 발행하는 국채의 종류에 국고채와 재정증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 ④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일본과 미국보다 낮은 상태이다.

해설 우리나라가 발행하는 국채의 종류에는 국고채, 재정증권, 국민주택채권,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이 있다.

- ☑ ① [오] 기획재정부장은 국가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오] 국채는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기획재정부장관)가 발행한다(국채법 제5조).
- ④ [오]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일본과 미국보다는 아직 현저히 낮은 상태이다. 2018년 현재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8.2%, 미국은 136%, 일본은 233%이다(2018 예산개요).

✍ 우리나라 국채의 종류

국고채	세금이 부족할 때 발행하는 가장 일반적인 유형의 국채
재정증권	일시적인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1년 만기로 발행하는 국채
국민주택채권	국민주택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국채
외국환평형기금채권	환율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하는 국채(외평채)

참고 2019 9급 선행정학개론 p.573